

난민들 목숨 걸린 일인데...대부분 '나홀로 소송'

광주지법 난민재판 들어가보니

고국을 탈출해 타국으로 떠나는 외국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인권'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급히 도망치듯 떠나는 고국에서 자신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생계유지도 힘들어 변호사 등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지방 행정 2단독과 고법 행정 2부 재판부에서 모두 36건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됐다.

지법 행정 2단독 황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은 선고·변론 등 33건이 진행됐고, 고법 행정 2부에서는 선고와 변론 등 3건의 재판이 열렸다.

난민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1차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라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서를 내고 6개월~1년가량 지나 면접조사를

24건 중 변호인 대동은 단 1건 재판 전까지는 통역 도움 못받아 서류 준비 어렵고 소송비용 부담 모국 판결문 한국어 번역 제출해야 통역망 구축 등 제도 보완 필요

받은 뒤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받은 난민 신청자 9286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0.4%(4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소송을 진행해 난민 지위를 얻어야 한다.

소송은 더 어렵다. 우선,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어도 거의 모른 채 타국에서 필요한 소송 서류를 준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날 재판에서는 3명의 통역인이 이집트어·아랍어·영어·러시아어 등 4개의 언어를 통역하며 재판부와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이 열릴 때는 통역 제공을 받지만 재판 전까지는 통역 없이 홀로 준비해야 한다. 어떤 증거가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지 통역 없이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법정 밖에서도 모처럼 대화가 가능한 통역을 만나다보니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려고 다른 재판 통역을 끌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석자들이 제출한 난민신청 이유를 재판부가 통역을 통해 물어보고 맞는 지 여부를 확인했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가,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A씨는 이날 재판부에 과거 수단에서 재판을 받았던 판결문 일부를 증거로 냈다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다.

A씨가 홀로 통역을 구해 법률적 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기란 쉽지 않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뿐 아니라 모든 난민 신청자들은 이같은 절차를 홀로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이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절차적 배

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역인도 재판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급하게 고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돈도 많지 않고,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변변한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난민 소송에는 변호사가 없다.

이날 지방 행정 2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24건의 재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된 재판은 1건이 전부였다. 난민신청자 스스로 사진, 기사, 본국에서 가져온 판결문, 친구의 진술서, 본국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의 자료도 모두 확보해 입증해야 한다. 조력받을 민간 단체도 적은데다, 일각에서는 3개월마다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 소송 진행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3개월마다 비자 갱신비(1인당 6-8만원)를 마련하면서 난민 인정 받을 때까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아동복지시설 비상 확진자 26명...전국 최다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기운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보건의복지부로서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코로나 집단 감염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 내 확진자는 26명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확진자 26명 가운데 아동은 20명, 종사자는 6명이었다.

광주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서 17명(아동 12명·종사자 5명), 자립지원시설에서 9명(아동 8명·종사자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동 확진자는 광주가 20명으로 21명을 기록한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광주지역 종사자 확진자(6명)는 제주도(7명)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아동이 92명, 종사자는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종사자 411명 중 372명(90.5%)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는 21명이었다. 전남은 703명 중 586명(83.4%)이 1차 접종을, 76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강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방역당국이 세밀히 신경써야 한다"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전 문제 말다툼하다

흥기로 남친 찢러 부상

광주서부경찰, 30대 여성 조사

광주서부경찰은 8일 남자 친구를 흥기로 찢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남친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흥기로 찢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남친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병내 남구청장

음해성 유언비어 수사 의뢰

김병내 남구청장이 자신과 관련된 음해성 유언비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광주남부경찰은 8일 김 청장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들이 퍼뜨린 음해성 허위 내용이 정치권에 퍼져나가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김 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김 청장은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 선거와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8일 광주시청 앞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동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조합 시공사에 대한 경찰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학동 참사' 현장 관계자들 혐의 일부 부인

굴착기 기사·현장소장 첫 공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현장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백술 대표(굴

착기 기사) A(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B(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

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과다한 살수 등의 조치가 미흡해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은 본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변호인들도 "현장대리인으

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들은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20분 열린다.

하지만 검찰이 학동 붕괴 건물 철거감리자에 대한 재판에서 관련 재판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재판 병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협의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협의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매 - 6,000만원 문의. 010-3605-5000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